

면역력 약해진 탓 '독감' 2년 전의 134배 ↑

신현영 의원 "마이코플라스마 2년 전 대비 1.7배" 소아·청소년 유행 커... 코로나 기간 면역 못 얻어 "소아과 대란 해결, 진료체계 강화 대책 강구해야" 상황 이룬데 소아 독감 예방접종 '하락' 지지부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2년 전보다 134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환자는 올해 10월까지 2만659명, 독감 환자는 197만9974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마이코플라스마 환자는 70.1% 늘었고 독감은 1만3319%, 무려 134배 폭증했다.

이는 면역 부재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면역 부채'(Immunity debt)란 계절성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이어지면서 호흡기 등 각종 감염병의 유행이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소아에서 여러 감염병 대한 첫 노출이 늦어지면서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최근 10년 간 연평균 환자 수는 마이코플라스마는 4만4626명, 독감은 121만2418.8명으

로 집계됐다. 코로나19 2년차였던 2021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수준인 1만 2144명,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만4754명만 발생했다.

그러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환자는 올해 1~10월 2만659명으로 70.1%, 같은 기간 독감 환자는 197만9974명으로 1만3319% 폭증했다.

연령대별로 최근 10년 간 마이코플라스마 환자 44만7387명 중 9세 미만인 33만712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가 4만6557명(1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0~9세 마이코플라스마 환자는 8595명에서 1만3497명으로 2021년 대비 56.7%, 10~19세 환자는 1324명에서 2714명으로 약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감 환자 1213만6891명 중 0~9세 연령대는 448만5953명(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19세가 261만6735명(21.6%)을 차지했다. 0~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3322명에서 올해 63만5556명으로 191배, 10~19세 환자는 2021년 2226명에서 올해 61만2666명으로 275배 증가했다.

질병 당국은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의 경우 신종 감염병이 아니며 백신은 없지만 항생제 치료가 가능

한 만큼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소아과 오픈' 양상에 대해서는 소아과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등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들이 체감하는 위험도가 그만큼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유행해 실제 발생 상황이 많이 위협하지는 않고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며 "소아과 수가 줄었고 의료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소아과 등 현장 의료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면역부재 현상이 진료체계의 부하를 일으키고 있지만 백신이 있는 독감에 대한 소아 예방접종은 지지부진하다.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2018~2019절기에 74.5%에 이르렀던 것과 대조적으로 2022~2023절기에는 71%로 하락했다. 지난 9~10월부터 지난 6일까지 2023~2024절기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한 어린이는 66.1%로 70%에 미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높은 강도의 방역으로 감소했던 호흡기 감염병이 면역부재 현상으로 급증했지만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마이코플라스마와 독감을 앓는 소아 환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소아 진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필수로 살리기를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아과 대란은 나아지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소아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소아진료체계 강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나주경찰, 치안파트너와 함께하는 교통안전활동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시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쉰 나주시민의 "교통사고 예방 불"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 한다고 밝히며 치안설명회를 진행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장흥경찰, '찾아가는 정성치안 주민 설명회' 개최

장흥경찰서는 지난 12일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받는 참여치안 추진을 위해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성군수 등 사회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양경찰, '드론 동호회(폴-스카이) 발대식' 가져

광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차메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서 자체 드론 동호회 '폴(pol)-스카이(sky)' 발대 행사를 가졌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담양경찰, 마을 담당 경찰관 제도 정착에 박차

담양경찰서는 최근 마을 담당 경찰관(이하 한걸음 순찰) 제도와 관련하여 수북면 주평리 주평마을 회관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소방, 이장 및 주민으로 구성된 '119청춘단' 운영

구례소방서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의 지형 및 특성을 잘 아는 이장 및 주민으로 구성된 '119청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완도해경, 민·관 구조파트너 합동 수중 훈련·정화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마량항 내 인근 해상에서 구조능력 강화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중훈련 및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범죄예방·현장 중심 치안' 광주경찰 조직개편 본격화

주요 강력사건 수사는 '형사기동대'로 확대 재편

광주경찰청이 범죄 예방·현장 치안 강화 방편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현장 치안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편안 핵심은 기존 인력과 각급 관서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현장 중심 치안 실현에 있다.

광주경찰은 우선 주요 강력사건 수사·조직범죄 예방 등을 전담하는 가정 '형사기동대'를 70여 명 규모로 재편한다.

기존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내 인력 46명이 일선 경찰서 형사를 추가 총원한다. 직제는 형사1계, 형사 2계, 마약범죄수사대 등 3개 팀 체제다.

청 형사와 내 강력·마약범죄수사 기능이 확대 개편되면서 '형사기동대' 부처장 역시 일선 경찰서장 직급인 총경으로 격상된다.

'형사기동대'의 업무 성격 등이 최종 확정되면 그에 따라 명칭이 '광역형사대' 또는 '광역수사대'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현재는 일선서 형사과와 기능·사무가 겹치지 않고, '형사기동대' 운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수사 대상 범죄 유형·성격·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막바지 협의하고 있다.

청사는 기존 강력범죄·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이용하되, 일부 중형 인력 수용에 따른 공간 재조정을 추진한다. 이처럼 직접 수사 부서가 따로 분리하면서 청 형사과는 과학수사계 등 지원 부서만 남기고 존치한다.

또 현장 치안·방법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주청 생활안전부에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신설 부서인 범죄예방과를 나란히 둔다. 특히 범죄예방과는 가정 '기동순찰대'가 새롭게 출범한다. '기동순찰대'는 100여 명 규모로 주요 범죄 발생 우려 지역·다중이용시설 등지에 순환 배치되며 범죄 예방 순찰을 전담한다.

부서 통폐합·기능 재조정을 통한 인력으로 총원하며 청사는 남부경찰서 내 옛 방법순찰대를 개축해 활용한다.

일선서 정보과는 사실상 폐지, 광주청 중심으로 흡수 통합된다. 다만 광산서 정보과만은 존치한다. 관할 내에 외국인 밀집 거주구역, 공항이 있어 외사 기능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폐지되는 나머지 4개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일부 정보경찰은 광주청 공공안전정보의사과 산하 광역정보 1·2·3계로 소속이 바뀐다.

오유나기자

범죄 첩보 수집과 집회 시위 현장 내 질서 유지·중재 기능을 유지하되, 전체 정원이 감소하며 광주청 중심으로 집적화되는 것이다.

광역정보 2·3계가 북·동부서 관할지와 서·남부서 등 각 2개 구역 내 기존 정보과 기능·업무를 이어받는다. 각 광역정보계 업무공간은 북부·서부서 정보과 현 사무실을 활용한다.

반면 광주청 안보수사대 인력 정원과 조직이 모두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자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안보수사권 일체가 경찰로 넘어오면서 업무 영역이 확장, 경찰청 본청에 '안보수사단'이 신설될 때 다른 것이다. 안보·산업기술보안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전문인력 총원 또는 재교육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상반기 정기 인사를 기해 조직개편이 현실화될 것이다. 사무공간 재조정·확충을 위한 개축 공사는 진척이 있다. 장규류 추가 구입 등도 조직개편 시점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방향·구체적인 직제 등은 막바지 협의·검토 단계다. 경찰청 지침·개편 취지에 부합하되, 광주청의 실정도 충분히 감안해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실무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한파에 '고드름 주렁주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마약 투약·외국인 노동자에 유통' 30대 공급책 구속 송치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하거나 삼습 투약한 베트남 국적 마약 공급책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법 체류 베트남인 A(3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엑스터시 마약 200정을 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공급한 혐의다. 또 최근까지 72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17g을 보관하고 각종 마약류를 삼습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베트남 마약 밀반입 조직의 공급책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 2021년부터 전남 서부권 공장·농촌·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목포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일하던 A씨를 1년 6개월 동안 추적해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7차례에 걸쳐 외국인 마약 사범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목포해경은 마약 범죄의 폐단이 큰 만큼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스